

## 3·4세 누리과정 확대의 의미

이영소장

**지난 1월 18일,**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3·4세의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에 이은 후속정책이다. 우리나라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적합한 공통과정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작년 5월 5세 누리과정 시행을 발표하였고, 2012년 예산안에 만 0~2세에 대한 무상보육 비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기관이용이 절실한 시기인 만 3·4세 유아는 교육비·보육료 전면 지원정책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따라서 이번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 발표는 취학 전 모든 영유아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정책을 완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OECD에서는 유아기에 대한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 3~5세 유아의 취학율을 90%이상 제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만 3~5세 유아의 약 81%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약 19%인 26만 명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3·4세 누리과정 시행 발표로 인하여, 2013년부터는 만 5세 유아와 같이 만 3·4세 유아도 공정한 출발선으로서의 교육 및 보육 기회를 보장 받게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두고 한정된 재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실질적으로 취학 전 모든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하는 0~2세 영아와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 기관이용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무엇보다 모든 유아들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특히, 5세 누리과정과 만 2세 이하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만 3·4세 공통과정의 개발은 최종적으로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을 이루는 연결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소는 5세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3·4세 누리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5세 누리과정 개발 시 지적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3·4세 누리과정 개발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학계와 현장, 그리고 학부모가 유아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